

2026 - 4호
(2026. 8월 다섯째주)

정책 동향

◆ 국정 동향

◆ 시정 동향

◆ 타시도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 062-613-5194

목 차

I. 국정 동향 1

- ① 【행정안전부】 지방 주도 성장 위한 세제개편 추진 1
- ② 【국토교통부】 K-UAM 초기 상용화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최대 400MW 규모 해남 태양광 발전단지 첫삽 8

II. 시정 동향 11

- ① 【행정통합추진과】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전문가 의견 수렴 11
- ② 【반도체산업지원과】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 공급 추진 13
- ③ 【미래차산업과】 서남권 자동차산업 ‘AI 대전환’ 이끈다 14

III. 타시도 동향 16

- ① 【서울】 도시계획시설 3D 입체도면 전국 최초 공개 16
- ② 【대전】 대전, 전국 최초 청년공간 인공지능 전환 시범운영 17
- ③ 【경북】 전국 최초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20

국 정 동 향

1

행안부, 지방 주도 성장 위한 세제개편 추진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힘.
- 이번 개편은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세제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기부와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둠.
- 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기존에는 기부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 정부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개편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 유인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세액공제 개편 사항(지방세 포함) >

구분*	현행(전 지역 동일)			개편(지방 우대)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천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천만 원
①수도권	100%	44.0%	16.5%	100% (현행 유지)	44.0% (현행 유지)	16.5% (현행 유지)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55.0%	27.5%
③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④유형인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현행 19만 3,500원에서 개편 후 23만 7,500원으로 약 4만 4,000원 증가하며,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의 자립 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임.
-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인력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R&D 비용과 투자액에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하고,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에 따른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 관련 법령 개정 및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 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R&D·투자 세제지원은 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참고1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주요 개편사항(요약)

구분	주요 내용	현행 (현재 기준)	2026년 개편안	적용시기	기대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우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폭 상향	• 10만 원 이하 : 100% 공제 • 10~20만원 : 44%공제 • 20만원초과 : 16.5%공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 시] • 10~20만원 : 최대 55%로 상향 • 20만원 초과 : 최대 27.5%로 상향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27.1.1. 이후 기부분	기부자의 체감 한납액 증가로 지방으로 의 기부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기업의 지방 투자 및 R&D 세금 감면	•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본 투자 세액 공제율 적용	[지방우대계수 도입] • 기본공제율 × 최대 1.5배(우대지역*)를 곱하여 파격 감면 *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27.1.1. 이후 발생·투 자분	낙후 지역에 투자할수 록 세금 혜택 기하급수 적 증가, 기업 유치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소득세 면제	• 지방 이전 시 이주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이전 시] •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세 전액 면제	영 시행 일 속한 과세기간 분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및 근로자 지방 정착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전남·광주 통합 특구 창업기업 세금 100% 면제	• 일반적인 창업 감면 규정 적용	[투자진흥·문화산업진흥지구 내] • 창업시 첫 5년간 소득·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7.1.1. 이후 창업·신 설분 (~'29.12. 31.)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세특례제한법」 § 58 개정)

- (제도개요) 개인이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제공 (연 2,000만원 한도)
- (개편내용)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방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지방에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크게 상향

< 세액공제 개편사항(지방세 포함) >

구분*	현행(전 지역 동일)			개편(지방 우대)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천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천만원
수도권	100%	44.0%	16.5%	100% (현행유지)	44.0% (현행유지)	16.5% (현행유지)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55.0%	27.5%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세특례제한법」 § 10 · § 24 개정)

- (현행) R&D · 투자 등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세 · 법인세에 해당 R&D비용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지원 중
-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동일한 공제율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적용 제외

- (개편내용)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4개로 구분하여 기준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 *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 지방우대계수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③기타 비수도권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적용사례) A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R&D·투자를 위해 4개 지역별로 각 1조원(총 4조원)을 지출하는 경우 공제액 변화

지역구분	공제액(억원)			
	현행		개정안	
	R&D	투자	R&D	투자
① 수도권	3,000	1,500	3,000	1,50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3,000	1,500	3,300	1,650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3,000	1,500	3,900	1,950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000	1,500	4,500	2,250
합 계	12,000	6,000	14,700	7,350

⇒ 현행 대비 지역에 따라 +10%~50% 지원 상향

-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2 개정)

- (현행)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한시적)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 (개편내용) 기업 이전·투자 등으로 근로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 비과세 한도: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50만원)

< 이주수당 비과세를 위한 4가지 요건 >

1.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
2.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3.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4.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21의36 신설)

- (개편내용)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12.31.)

2

국토부, K-UAM 초기 상용화 위안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계획 △운영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임.

-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으로,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과 아라뱃길 등에서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온 데 이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임.
-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하여 구역·버티포트·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및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음.
-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용구역을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고,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사업 준비부터 지정까지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3

기후부, 국내 최대 400MW 규모 해남 태양광 발전단지 첫삽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전남 해남군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함.
- 이번 사업은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국산 기자재 활용과 주민참여·이익공유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이익공유 및 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연계해 나갈 방침임.

<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착공식 개요 >

- 일시·장소 : 26.8.7일(금) 16:00~17:00, 전남 해남군 태양광발전 예정부지
- 참석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 부시장, 해남군수,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지역주민 대표 등 250명
- 주요내용 :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지역나눔 행사 등

-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능력 확충’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발전단가 인하·지역주민 혜택 확대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원칙을 구체화하는 사업임.
-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를 활용해 2028년까지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 중 10MW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 재생 에너지와 농업이 공존하는 사업 모범사례를 실증할 계획임.
- 모듈·셀·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를 국산 제품으로 활용해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낮춰 발전단가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참여·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해 사업기간 내 총 1,5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준공 이후 RE100 기업 및 산업단지 등에 연간 529GWh 규모의 무탄소전력을 공급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도·해남군의 ‘솔라시도 AI 에너지신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SK하이닉스), 솔라시도 AI 국가컴퓨팅센터 등

참고1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위 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308 일원
- 규 모 : 400MW(일반 390MW + 영농 10MW) * 단일부지 국내 최대 규모
- 사 업 자 : 한국남동발전(주)
- 총사업비 : 6,846억원
- 사업기간 : (건설) '26. 8월 ~ '28. 8월 / (운영) 준공 후 20년



2. 사업 특징

- 방치된 유헴부지('70년대 간척, 염해간척지) 활용 및 산업육성 지원
 - 국산 기자재 활용 및 영농형 태양광(10MW) 사업모델 실증 추진
- RE100 산업단지內 안정적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기반 제공
 - 전남도·해남군 “솔라시도 AI 에너지신도시” 기업유치 선도사업
-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채권형(총사업비의 4%) 주민참여(협동조합)로 지역지원 및 수익 확보
 -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 동향

1

행정통합추진과,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전문가 의견 수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을 논의했음.
-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를 주제로 2개 기획포럼과 12개 소분과로 진행됐으며, 특별법 특례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 권한·제도·재정 재설계, 지방재정 구조와 자치분권 발전 방향, 지역안전 거버넌스 성과와 과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음.
- 기획포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진단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양받을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유지할 권한을 정하고 나머지 권한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포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지원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기획포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주요과제에서는 김홍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특별법을 설치와 개별 특례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한배분·재정운용·사무배분·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사례 발표에서는 개별 사무 중심의 제한적 권한이양,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재정 미이양, 중앙부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제기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과 권한·재정의 동반 이양,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실무 검토와 함께 이날 제시된 학계·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특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충실히 다듬겠다고 밝혔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부·한국전력·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으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과 비용 분담 등을 위해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번 협약으로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됨.
- 협약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공급 정책을 총괄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설비 구축 등 사업을 시행함.
- 기업은 비용 분담과 전력 사용을 담당함.
-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6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되며, 2029년부터 1단계 약 3GW를 공급하고 이후 2단계 추가 설비를 구축해 누적 6GW 이상을 공급할 계획임.

- 전력공급 선로는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연결하고, 2단계 선로는 기술 검토와 기업·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임. 변전소는 1단계 1개소를 구축하고 2단계 1개소를 추가 구축하기로 함.
- 1단계 전력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고, 민간 분담금 일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특별시·정부·한전·기업이 한 팀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전남광주에서 열어가겠다고 밝힘.

3 미래차산업과, 서남권 자동차산업 'AI 대전환' 이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와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기술을 융합한 서남권 자동차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서남권 모빌리티 M.AX 포럼을 통해 SDV·SDF·자율주행·인간형로봇 등 모빌리티·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기술과 미래차 혁신 방향을 공유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가 여는 제조 AI 대전환을 주제로 서남권 모빌리티 M.AX 포럼을 개최했으며, 정진욱·임문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함.

- 포럼에서는 미래차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AIDX) 혁신협의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인공지능·자율주행·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로봇·선박·도심 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확장 가능성을 논의함.
- 기조강연에서는 SDV·자율주행·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등 세계적 기술 동향과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기반 서비스 등 미래산업 육성 방향이 제시됐으며, 완성차·부품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산·학·연 공동 실증의 필요성도 제언됨.
- 기술포럼에서는 세계 모빌리티 핵심기술, 모빌리티 제조 AX 혁신, AI 자율주행 혁신, SDV·SDF, 자율주행 핵심기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등 6개 분과에서 20명의 전문가가 발표했으며, AI 기반 스마트공장, 가상공간을 활용한 차량·제조공정 시험, 자율주행 센서·통신·보안 기술 등이 소개됨.
- 특히 자동차 제조 현장에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적용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과 자동차 AI·센서·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드론·전기선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MAX 전환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80억 원을 투입해 완성차기업 2곳과 부품기업 약 700곳의 제조현장에 맞춤형 휴머노이드를 도입·실증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형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과 서남권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타 시 도 동 향

1

서울, 도시계획시설 3D 입체도면 전국 최초 공개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 입체도면으로 구현해 지상·지하 위치와 높이·깊이, 시설 간 중첩관계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함.
-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대상지를 검색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S-Map과 연계된 입체도면을 PC·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회전·확대·축소와 시점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실제 조성면과 시설 결정경계면도 비교할 수 있음.
- 최근 도시계획시설이 지상·지하·공중 공간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나,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시설의 높이·깊이와 시설 간 중첩 관계, 도시계획시설과 일반 건축물 등의 입체적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서울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임.

-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충충공원에 처음 적용하며,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 토지와 공원의 공간적 구분 등을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함.
-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도면 작성 기준을 마련했으며, 입체도면을 법정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지정 고시도면 및 금회 추가 참조도 >



2

대전, 전국 최초 청년공간 인공지능 전환 시범운영

-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공간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고, 청년공간 1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년의 인공지능 접근권과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보편복지 모델을 도입함.

- 이는 개인에게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청년공간 자체를 인공지능 거점으로 전환해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 와이파이와 이어 인공지능 접근권을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기준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청년은 청년공간의 무선인터넷(WiFi)을 통해 챗지피티(ChatGPT),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인공지능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한도 도달 시 경량 인공지능 모델로 전환해 지속 이용할 수 있음.
- 시는 개인별 유료 구독 대신 기관 통합 API 종량제 방식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했으며, 1인당 월평균 이용료는 1,666원 수준으로 개인이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94%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대전시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의 실제 이용 양상을 분석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집 데이터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익명 처리해 통계 및 정책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임.
- 대전시는 시범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청년공간 인공지능 전환(AI) 추진

대전시 청년공간 AI 접근권 지원 인포그래픽

1 왜 필요한가?



AI 접근권 보장 및
활용 역량 강화



경제적 여건이 AI 역량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



청년공간을 생성형 AI
활용·교육 거점으로 전환

2 사업 개요



기간
2026년 7월 ~ 12월
(시범운영)



대상
관내 청년공간 10개소
(시 3개소, 자치구 7개소)

예산 구성



계정 6백만원
/ 계정 1,000개



크레딧 4백만원
/ 1,000크레딧

개인 구독 대비

94%

예산 절감

1인당 월평균 이용료
1,666원 수준



계정 1,000개



소요예산
10 백만원

3 어떻게 운영되나?

1



청년 여부 확인 후
회원가입

2



청년공간 Wi-Fi
환경에서 동일 계정 사용

3



멀티LLM
(ChatGPT, Claude, Gemini 등)
및 AI 에이전트 이용

4



크레딧 차감 운영,
소진 시 경량 AI모델로
자동 전환

이용 한도 내 무상 제공

4 추진 체계



공공 AI 접근권
(Public AI Access)
거점 조성

청년공간 10개소에서
별도 유료 구독 없이 AI 이용



AI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
체계 구축

리빙랩 → 데이터 분석 → 정책 개선
/ 가명·익명 처리 후 정책 활용



공공 AI 기반
역량 강화

바이보코딩·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교육 및 실습 / 포트폴리오 구축

인프라 → 데이터 → 성장 선순환 구조

5 운영 대상 공간

시 청년공간 (3개소)



청춘나들목



청춘두두두



청춘너나들이

자치구 청년공간 (7개소)



자치구 청년공간
7개소 확대 운영

6 향후 계획



생성형 AI 플랫폼
(팩트셋)
계약 체결 완료



하반기 시범 운영
2026.7 ~ 12
(6개월)



자치구 산청
2026.8.14



사업 시행
2026.8 ~ 12



만족도 조사 및
확대 개편 방안 마련
2026.9월~ /
12월 조사



청년활동공간 제공 → 청년 AI 거점 공간 전환



-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2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

* ‘24년(157만), ’ 25년(197만), ‘26년 상반기(113만)

** 관광특구 : 일정 요건(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등)을 지닌 지역

- 이번 사업은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 지역에 2년간 총 60억 원(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딩,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함.
- 이번 공모는 전국 관광특구 보유 광역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서면평가를 통과해 발표심사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단 2개 광역지자체만 최종 선정되는 높은 경쟁률을 보임.
- 서면평가 60%, 발표평가 40%를 합산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된 만큼, 경북 관광의 경쟁력과 사업 추진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경북은 경주가 보유한 신라 천 년의 역사·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 국제회의 기반시설, 야간관광, 한류 문화콘텐츠 등을 연계한 글로벌 관광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경주 관광특구를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관광특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경상북도는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 사업과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 지구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 분야 국가 공모 사업 3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둠.
- 경북도는 관광교통 혁신, 광역 관광 접근성 개선, 글로벌 관광 콘텐츠 육성 등 관광객의 이동부터 체류까지 아우르는 관광 경쟁력 강화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선정은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의 핵심 대상지로 경북이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 관광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